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24.12.6.)
- ②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24.12.11.)
- ③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24.12.16.)
- ④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24.12.19.)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4)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24. 12. 6. 국민권익위)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16.9.28.)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2023년도 한 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등 수수 864건(66.8%),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다.

특히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약 84%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각급 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등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하여 총 2,197명이며,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부정청탁 111명(5.1%), 그리고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2명(0.5%) 순이다.

또한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16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계된 이후, 지난해 318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전국 지방의회 243개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확인해 미지정한 의회 23개(약 9.5%)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통보를 하였다.

전체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약 98.9%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별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에서 신고사건 접수·처리과정에서 금품등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제도운영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제도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이 시행된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감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 위반신고와 제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이 신고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89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20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올해 조사 결과 채용비리 39건, 업무부주의 822건
- 채용비리 건수 2019년 대비 올해 78.6% 감소…공정한 채용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채용비리 근절 노력 결실 거뒀

(‘24. 12. 11.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89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의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상의 절차 준수 여부 등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 전체 1,386개 기관 중 495개 기관은 채용실적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올해 조사에서 제외(단, 3년 내 1회는 의무조사)

이 중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및 감독기관이 조사를 요청한 29개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862개 기관은 해당 감독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채용비리 건수는 2019년 이래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채용비리 건수가 182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39건으로 78.6% 감소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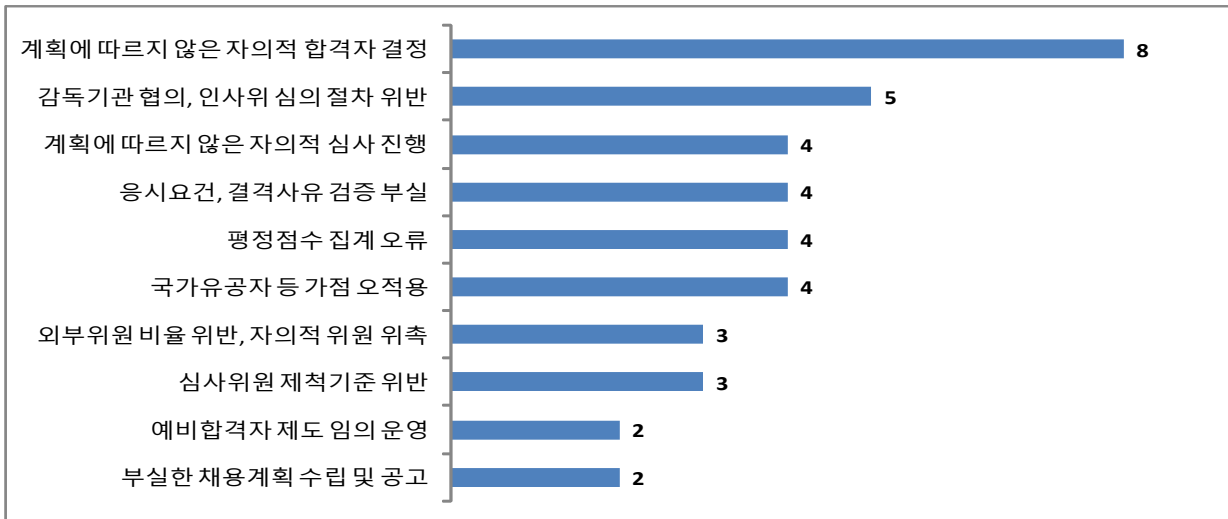
〈 연도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39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822

이번에 채용비리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전체 861건 중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채용비리 39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비리 39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계획 수립·변경 시 거쳐야 하는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징계처분 대상 유형별 건수 〉



< 주요 비위 사례 >

- ① (자의적 합격자 결정) 채용계획에 따르면 5개 항목에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 결정해야 함에도 4개 항목만 과반수 이상 '상'으로 평가받은 응시자를 합격 처리
- ② (계획수립 시 심의 절차 위반) 규정과 달리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채용계획에 없던 기관장 단독 2차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외부위원이 참여한 1차 면접시험 결과가 뒤바뀜
- ③ (외부위원 비율·제척 기준 위반)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그 밖에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중 각 공직유관단체의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지적사항은 총 822건으로 확인됐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5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38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44개 항목을 기준으로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분석해 기관별로 개선을 권고

올해는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비위건수가 많았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실시하여 402개 기관 총 9,308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

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 신고사건 접수처리,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내재된 채용 공정성 훼손 유발 요인 발굴 및 제거, 채용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2024년 9월에는 채용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부재로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불공정 채용’ 위험이 상존해 있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게 공정채용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채용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기타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총 398개 기관)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

- 국민권익위, 외국인 관련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 30명 초청
- 비자·유학생 취업 등 관계부처 최근정책 공유,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24. 12. 16. 국민권익위)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사항 해소 등 보다 나은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다양한 가치와 관습이 공존하는 세계 10대 강국인 한국에서 외국인자본투자와 글로벌무역, 국제적 교육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 올해 243개 지방의회 대상 전수평가 최초 실시...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69.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3점)에 비해 낮아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부패경험률 2.18%, 지방의회 부당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19.38%...지방현장의 부패 근절 및 청렴 향상 노력 필요

(‘24. 12. 1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먼저,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4개 유형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54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총 460개 기관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는데, 이는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

인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일부 유형에서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하였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점, 전년 대비) >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전체기관 (460개)	80.3 (▼0.2)	79.2 (▼0.8)	83.5 (▲1.3)
중앙행정기관 (46개)	80.9 (▲0.2)	81.1 (▲0.5)	82.8 (▲0.3)
광역자치단체 (17개)	78.7 (▲0.1)	77.5 (▲0.3)	83.0 (▲1.0)
기초자치단체 (226개)	77.1 (▲0.2)	75.6 (▼0.9)	81.1 (▲2.6)
교육청 (17개)	83.4 (▲1.3)	79.4 (-)	89.4 (▲0.5)
공직유관단체 (154개)	84.6 (-)	84.0 (▼0.3)	86.7 (▲0.8)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8개(3.9%)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3개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3년 연속 1등급 기관이 없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460개 기관 중 137개(29.8%)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하였고 133개(28.9%) 기관은 등급이 하락하였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20개(4.3%) 기관이고 강원 양양군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3등급 상승하였다.

청렴체감도는 79.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하였는데,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의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하락(-2.5점)하였고 기초자치단체(-4.1점), 교육청(-1.9점), 광역자치단체(-1.7점)에서 특히 하락 폭이

켰다.

이중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줄어든데(-0.02%p) 반해,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2.18%로 전년 대비 증가(+0.19%p) 했다.

그리고 인사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항목의 점수도 많이 하락하여 조직 내부 운영과정에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는 83.5점으로 전년 보다 1.3점 상승하여, 각급 기관에서 평가 지표의 취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2년 연속 가장 큰 폭의 상승('22년 75.9점→'23년 78.5점→'24년 81.1점)을 보였다.

한편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년도 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 중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22개 기관 중 18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강원 강릉시, 전북 순창군, 경북 교육청, 한국콘텐츠진흥원 4개 기관은 청렴컨설팅 지원을 통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크게 상승하였다.

공공의료기관 · 지방의회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13개) 및 지방의회(243개)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의 성격

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13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79.6점이고, 243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9.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청렴체감도는 78.9점, 청렴노력도는 86.8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대상 13개 기관 중 2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하였고 6개 기관이 하락하였다.

청렴체감도는 계약·진찰 등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체감도 점수(88.2점)보다 소속 공직자들이 조직운영에 대해 평가한 내부체감도 점수(58.5점)가 낮았는데, 점수 격차(29.7점)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컸고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1.97%)은 외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0.22%)보다 크게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구성원들은 내부체감도 세부항목 중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51.1점)과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54.1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갑질행위’ 항목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모든 기관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간부 등 상급자의 개선의지 부족’ (28.2%) 지적이 가장 많아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시책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전년도 평가를 실시했던 광역의회(17개)와 기초 시 의회(75개)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경기 동두천시와 강원 동해시 의회이고 경기 수원시 의회는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67.4점이다. 청렴체감도는 ‘의정활동’ 과 ‘의회운영’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6.5점)이,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9점)보다 낮았다.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은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악화되었는데, 특히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19.38%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광역의회 4.96%p, 기초 시 의회 2.13%p)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현장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는 77.8점인데, 광역의회(92.7점)보다 기초의회(76.7점)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이행력 제고’ 지표의 점수 차(34.3점)가 가장 큰데,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에 대한 부패인식 중 가장 낮은 항목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5.4점)인 점을 고려하면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 민원인과 공직자가 지적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청렴노력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지방현장에서의 내부체감도

의 부패경험률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